

##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한관계

구 본 학\*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의 기초 위에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대북정책에 있어서 3가지 원칙을 표명하였다. 즉, (1) 한국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2) 한국은 북한을 흡수통일할 의도가 없으며, (3) 한국은 남북한이 서로 합의가 용이한 사항부터 화해와 협력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경협을 확대하고 금강산 관광사업을 성사시키는 등 남북 교류를 증대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계층에서는 햇볕정책이 북한 정권의 속성을 잘못 판단한 순진한 구상이며,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속도, 원칙 및 상호주의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sup>1)</sup> 추진되고 있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증대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력한 국가안보와 남북협력을 동시에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즉, 남북협력과 군사회담과 신뢰구축, 군비통제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안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구조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2000년 국방백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북한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사업의 확대, 남북 교류 증대 등의 성과를 올리는데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작년 6월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1) 한반도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 (2) 이산가족 상봉 및 장기수 송환, 그리고 (3) 남북경협을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하였으며, 군사분야에 있어서는 경의선 복원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었고, DMZ 남측 지역에서는 지뢰제거 작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부시 정부의 출범은 남북관계의 발전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였다. 이미 작년 10월 조명록의 방미 이후 북한은 남북관계보다는 대미관계 개선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고 판단되며,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무산되고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자 북한은 대미 및 대남관계를 재조정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선거 기간 및 당선 이후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대북정책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 검증, 그리고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후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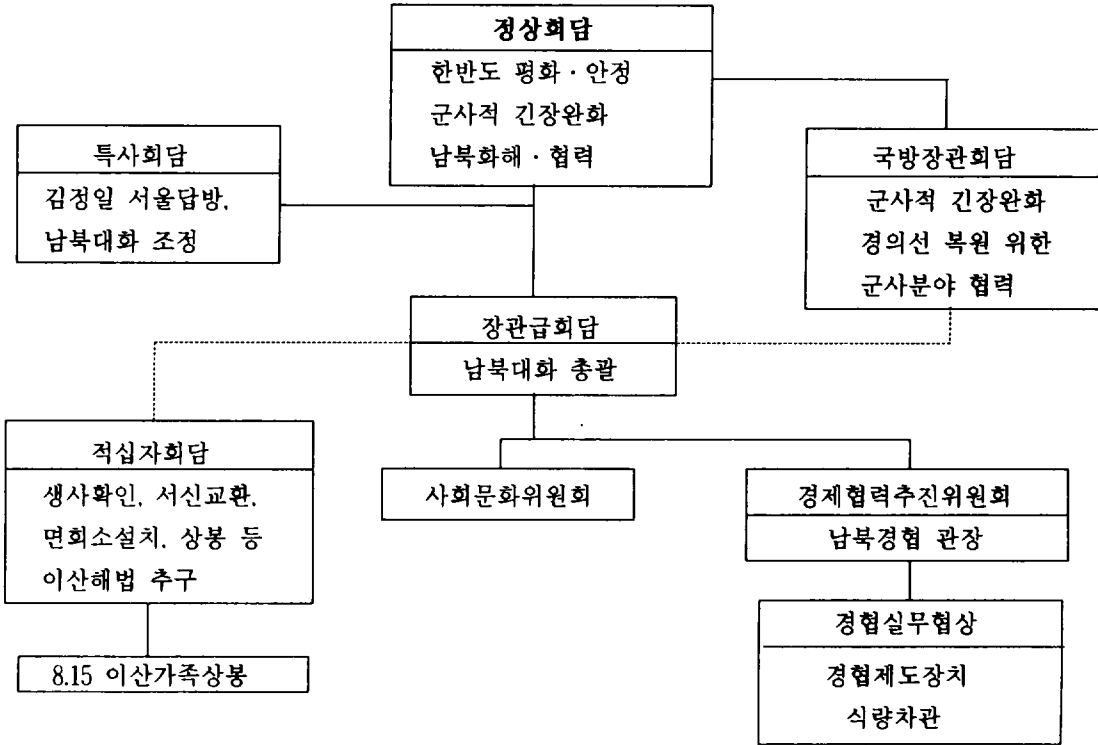
본 고에서는 이러한 남북관계의 현실적인 상황하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 한국국방연구원

1) Scott Snyder. "The Inter-Korean Summit and Implication for US Policy."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II, no. 2 (winter 2000), p. 69.

##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그림 1〉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구조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장관급 회담과 그 산하에 사회문화위원회,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문화 교류와 남북경협을 관장하며, 적십자회담을 통하여 이산가족의 상봉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별도의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협상과 경의선 복원을 위한 실무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구도 하에서 작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제1차 장관급회담이 개최되어 6.15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기본원칙과 자세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남북연락사무소」기능을 정상화하고 조총련 동포들의 자유로운 고향 방문에 합의하였다. 또한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을 통해 민족경제 공동체 형성 작업을 본격화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었으며,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작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양측은 「8.15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및 「이산가족 면회소」설치에 합의하였고, 한국의 비전향 장기수를 송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의해, 8월 5일부터 12일 사이에는 한국의 48개 언론사 사장 등 58명이 방북하였으며, 광복 55주년을 경축하는 남북 교향악단 합동연주회가 8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8월 15일에는 남북 양측에서 각 100명씩의 이산가족이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9월 2일에는 한국측의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고 이산가족 문제,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 남북경협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경의선 복원과 임진강 수방 사업, 백두산-한라산 관광 추진 등 남북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실질적 토의를 진행해 나가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진전은 남북관계 개선의 지속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9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금강산에서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어 이산가족 방문단의 추가 교환, 생사 및 주소 확인, 그리고 서신 교환에 합의하였으며,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제3차 장관급회담에서는 남북 화해를 위한 실천적 사업 추진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로써 실천적 차원에서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협 실무회의가 개최되어, 남북간 투자보장 및 남북교역시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내에 타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주에서는 남북한 사이의 최초의 국방 최고책임자간 회의라고 할 수 있는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어 6.15 공동선언 이행과 관련한 군사문제를 협의하였다. 동 회담에서 남북 국방 최고책임자들은 (1)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노력 및 민간의 교류·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2)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며, (3) 경의선 복원을 위한 군사 실무회담을 추진하고, (4) 남북 연결 철도 및 도로 주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개방 및 관리문제를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하고, (5) 2000년 11월 중순 북측 지역에서 2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7월 26일에는 최초의 남북 외무장관 회담이 아세안 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에 즈음하여 방콕에서 개최하여,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문제, 대외관계 및 ARF 등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또한 8월 14일에는 1996년 11월 이후 3년 9개월만에 남북연락사무소가 재가동되었으며,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김용순 노동당 비서가 제주를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및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서울 방문, 이산가족 문제 해결, 경협 활성화 조치, 경의선 복원 및 도로 개설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이와 같이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 2개월간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1989년부터 1997년까지 북한을 방문한 한국측 인사는 총 2,408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8년에는 3,317명, 1999년에는 5,599명, 2000년에는 7,280명, 2001년에는 3월까지 1,361명이 북한을 방문하여 1998년 이후 북한을 방문한 한국측 인사는 총 17,557명에 달하였다.<sup>2)</sup> 또한 남북 교역은 1997년 3억80만불에서 1998년에는 2억2,100만불, 1999년에는 3억3,300만불, 2000년에는 4억2,500만불을 기록하였다.

〈표 1〉 남북 인사교류 및 교역

		1989-1997	1998	1999	2000	2001. 3.
인사 교류	방북(명)	2,408	3,317	5,599	7,280	1,361
	방남(명)	575		62	706	145
남북교역(\$)		3억80만	2억2,100만	3억3,300만	4억2,500만	3,680만

2) 1989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을 방문한 북한측 인사는 총 575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1999년 62명, 2000년에는 706명, 2001년 3월까지 145명이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1999년부터 2001년 3월까지 총 913명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다양한 정부 또는 비정부 차원에서의 남북회담이 성사되어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장관급 회담 4회, 특사회담 1회, 국방장관 회담 1회, 군사실무회담 5회, 경제실무회담 2회, 적십자회담 3회 등 총 16회의 남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를 통하여 판문점 연락사무소가 재가동 되었으며, 경의선 철도 연결 및 개성-문산간 고속도로 건설, 이산가족 문제 해결, 대북 식량지원, 남북 군사회담 개최, 남북경협 의 제도화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와 방식에도 변화가 초래되어 3회의 상봉 행사에서 3,100명이 대면상봉 하였으며, 6,000명의 생사 및 주소가 확인되었으며, 600명이 편지를 교환하였다. 이를 통하여 월남자의 방북과 월북자의 방남, 남북어부 2명과 국군포로 3명의 가족이 상봉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남북관계의 증진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상당한 액수의 대북지원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은 6월 3일부터 10일까지 평양교예단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을, 8월 18일부터 23일까지는 조선국립교향악단을 서울에 초청하면서 약 5,314만불을 북한에 지불하였으며, 대북 식량지원 60만톤(태국산 쌀 30만톤 및 중국산 옥수수 30만톤)을 지원하는데 약 1억1천만불을, 비료 30만톤을 지원하는데 약 7,500만불을 사용하였으며,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연간 약 1억5,000만불을 북한에 지불하였다. 이로써 약 3억8,800만불이 북한에 지원되었다.

## 남북 군사대립관계의 지속

작년 정상회담이후 상당수의 한국내 북한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위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후 김포공항에서 가진 대국민 성명에서 "55년간 적대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의 새 전기를 닦는 시점에 왔다"고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발표하였다.<sup>3)</sup> 이러한 대북 인식에 근거하여 김대중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군사훈련을 취소하거나 축소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더 이상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지는 검토해 보아야 한다.

〈표 2〉 북한의 군사력 변화 추세(1995-200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병력(백만)		103.0	104.0	105.5	114.7	117.0	117.0
지상군	부대	군단	18	19	20	20	20
		사단	53	53	54	54	63
		여단	99	99	99	99	113
	장비	탱크	3,800	3,800	3,800	3,800	3,800
		장갑차	2,500	2,600	2,800	2,270	2,300
		야포	10,800	10,850	11,000	11,200	12,000
해군	전투함	434	434	430	430	430	
	지원함	320	330	335	340	470	
	잠수함	26	26	35	40	90	
공군	전투기	850	840	840	850	850	
	지원기	480	500	510	510	840	
	헬기	290	290	290	310		840

자료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4-1995부터 2000까지 각년도판.

3) 『조선일보』, 2000년 6월 16일자.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서도 지속되었다. 북한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1997년에는 -6.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다. (표 3 참조)

〈표 3〉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세(1990-199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경제성장률	-3.7	-3.5	-6.0	-4.2	-2.1	-4.1	-3.6	-6.3	-1.1	-6.2

자료 : 한국은행, 『북한 GNP 평가』, 각년도.

2000년 3월 한미 연합사 사령관 토마스 슈워츠 장군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의 증언에서 “북한은 현재 세계 제5위의 군사 강국이다. 100만명이 넘는 지상군은 공격적인 화력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 제3위의 군사력이다..... 북한의 야포는 12만문 이상의 자주포 및 견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만명 이상의 정예로 구성된 특수부대는 우리의 전후방에 대한 동시 공격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sup>4)</sup>

더욱이 100여문에 달하는 북한의 240mm 방사포(다연장로켓)는 서울을 사정권내에 두고 있으며, 1회의 공격으로 서울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북한의 특수부대는 전쟁발발을 전후하여 한국의 중심 깊이 침투하여 후방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기갑부대는 한국의 기갑부대보다 수적으로 현저히 우세하다. 슈워츠 사령관은 “북한은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다. 과거 12개월 동안 북한은 전투 준비태세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과거 5년 동안보다 해온 것보다 더 많은 군사력 증강을 꾀하였으며, DMZ 부근에 240mm 장거리 방사포와 170mm 자주포를 방호기지에 배치하였다. 또한 전방지역에 대전차 방호벽을 설치하였으며, 평양과 DMZ 축선에 집중적으로 전투태세를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방지역의 해안 방어를 강화하고, 미사일 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 및 전투기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5)</sup>

한국의 『국방백서 2000』 또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즉, “최근 북한군은 지속되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대포동 미사일 개발 노력과 함께 장사정포(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를 전방 지역에 증강 배치하는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sup>6)</sup> 또한 “북한군은 연평해전(1999년 6월) 이후 실질적인 전투기량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1999년 하계훈련기를 이용하여 지상군은 포병사격과 기계화부대 기동훈련을 강화하였고, 해군은 해안포, 함포 및 함대함 유도탄 사격훈련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수전부대는 해상 및 수중 침투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1999년 1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실시된 동계훈련에서는 포병 실사격훈련과 기계화부대의 야외 기동훈련을, 해군은 전투준비태세 점검을, 공군은 협동 방공 및 기지전개훈련을 강화하였다.<sup>7)</sup>

4) General Thomas Schwartz, Statement Before the Senate Armed Forces Committee.” in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www.nautilus.org, March 7, 2000.

5) Schwartz, *op. cit.*

6)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2000』, p. 46.

7) 『상세서』, p. 46.

2001년 3월 27일 슈워츠 연합사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군사위협은 지난해보다 더욱 심각해 졌다”고 증언하였으며, 미 태평양사령관 블레어 제독 또한 동년 3월 28일 상원 세출위원회에서의 증언에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600기의 스커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sup>8)</sup>

이상에서 볼 때, 남북관계가 진정으로 화해와 협력을 향해 발전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군사훈련 축소와는 반대로 북한은 군사력과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왔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원조와 한국의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비롯한 대북 경험을 활용하여 노후화된 군사장비를 개선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정상회담 이후 한국내에서는 평화적인 분위기가 확대되어 한국민들은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확대할 것이며, 김정일은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북한의 독재체제 또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비판은 반통일 보수세력 또는 반민족적인 발상으로 매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북한은 지속적으로 군사력과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여 왔다. 최근 미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교착은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 과거 「7·4 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보듯이,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당국간의 선언이나 협정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진정으로 임하고, 기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때만이 진정한 화해·협력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남북관계 전망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 추세와 더불어 클린턴 정부 하에서는 미·북관계와 일·북관계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하였으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회담하였다. 일·북 수교협상도 상당한 단계로 진입하는 듯 하였으며, 올해에 들어서는 1월 15일 네덜란드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유럽과의 수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sup>9)</sup>

한편, 지난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김정일은 상해를 방문하면서 “18년만에 와보니 상하이엔 천지개벽”하였다고 표현함으로써 중국의 경제개방과 이로 인한 성장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미·북관계와 남북관계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장관급 회담에 불참하였으며, 탁구 단일팀 구성에 합의한 후 파기하였고 남북 적십자회담에 불참하는 등 북한의 대남 약속을 유예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강경노선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대미 비난을 재개하고 있으며, “미국이 진심으로 조선반도에서의 군축과 평화를 바란다면 우리의 상용무력 축감 문제를 논하기 전에 남조선 강점 미군부터 철수해야 한다”<sup>10)</sup>고 주장하는 등 대미 및 남북관계 개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8) 『동아일보』, 2001년 3월 31일자.

9) 북한은 1월 15일 네덜란드와 수교하였으며, 1월 23일에는 벨기에, 2월 6일 캐나다, 2월 7일 스페인, 3월 1일 독일, 3월 5일 룩셈부르크, 3월 8일 그리스, 3월 9일 브라질, 3월 26일 뉴질랜드, 4월 5일 쿠웨이트와 수교하였다.

10) 『동아일보』, 4월 17일자.

또한 북한의 인민무력부장 김일철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러시아로부터 Su-27 및 MiG-29 전투기, PCHELA-1 정찰기와 레이다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였으며,<sup>11)</sup>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군사적 우호관계를 회복·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으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으며, 하이난도 공해상에서 미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 충돌사건으로 인해 미·중관계는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미러 및 미중관계의 악화는 미북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전반적으로 남북간의 화해·협력에 관한 전망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보다는 그다지 밝은 편은 아니다. 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양측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는 없으나,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간에 정치적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남북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현재 중단되고 있는 4자회담은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남북간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할 수 있다. 관광사업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남북간의 정치적 관계에 의해 쉽게 단절될 수도 있다. 슈워츠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미 의회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해 왔다.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한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북한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은 군을 중시하는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최근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재래식 무기 우선 감축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다시 주장하고 있다.<sup>12)</sup>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과의 협의에 성실하게 임할지는 아직 의문이다. 북한은 김정일에 의한 전체주의 1인 독재체제와 폐쇄적인 정치체제를 변화시켜야 하며, 남북대화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남북간에 진정한 신뢰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며,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보수화 하는 분위기를 보였으나, 최근의 흐름은 남북관계 개선에 다소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언론들과 CFR을 비롯한 외교전문단체들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으며, 최근 서울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상원에서의 인종청문회에서 “대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하는 방법보다 더 낫은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은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1) 엄격한 상호주의 적용문제, (2) 합의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투명성 문제, (3) 북한의 재래식 무기 문제 등으로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공조과정에서 약간의 애로는 예상된다고 하겠다. 한국으로서는 한·미 공맹관계의 견고성을 기반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에 제시한 포괄적 상호주의와 한·미간 역할분담론에 입각하여 우리의 입장을 논리적·합리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1) 『한겨레신문』, 2001년 4월 30일.

12) 『동아일보』, 2001년 4월 18일자.

이와 더불어 보다 중요한 사실은 한국만이 화해와 협력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보다 성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북한도 한국의 대북지원에 성실한 태도로 화답해야 한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평화선언' 또는 '평화협정'을 논하기 전에 군 당국자간의 직통전화 개설, 군 병력 이동 또는 대규모 군사훈련시 사전 통보, 군 인사간 상호 교류 등 1992년에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보다 성실하게 실천하는 성의를 보여 주어야 한다. 북한이 그러한 자세를 보일 때 한국의 대북지원은 한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남북간의 진정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